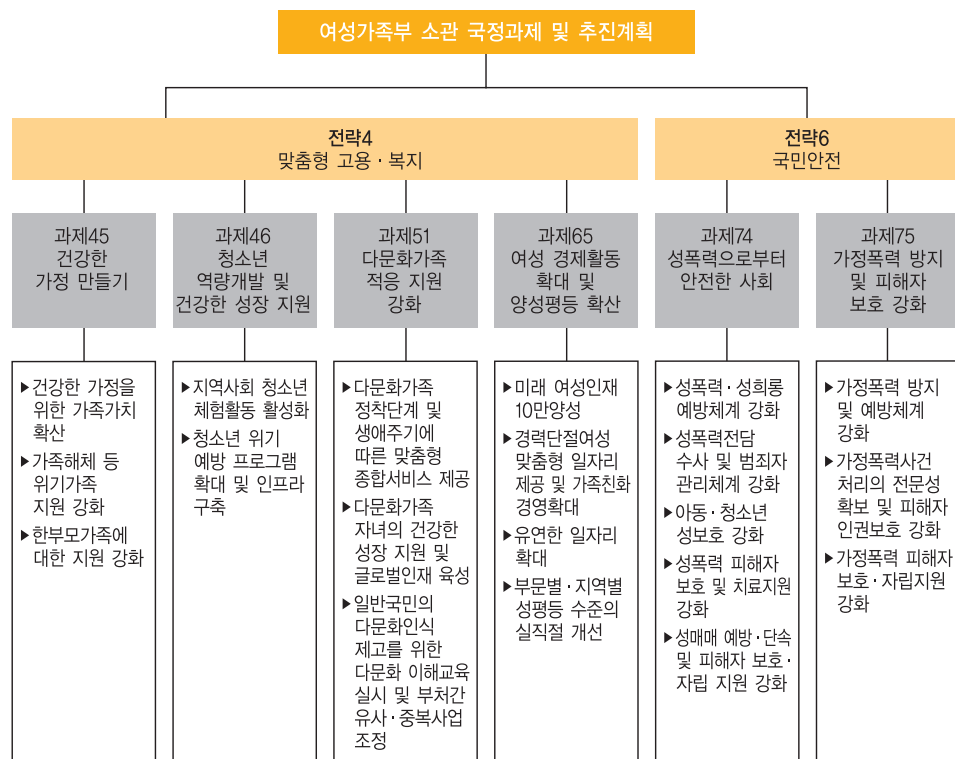


## 2014 여성정책의 길, 국민에게 묻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1년동안 수행한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원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 주요 조사 내용은 여성가족부 소관 국정과제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인지도, 평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임.
- 본 조사는 2014.1.24.~2014.2.2.에 걸쳐 전국 15개 광역 시도(제주제외)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146명을 대상으로 진행함.



자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관계부처 합동. (2013.5.28.)

(그림 1) 여성가족부 국정과제 및 추진계획



## I.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국정 과제에 대한 국민 의견

### 이슈 #1

####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정과제는 '건강한 가정 만들기'

- 여성·가족·청소년 정책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건강한 가정 만들기(34.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33.2%)',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12.4%)',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슈 #2

#### 여성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남성은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선정

- 여성의 경우,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37.1%)'를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건강한 가정 만들기(39.5%)'가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함. (〈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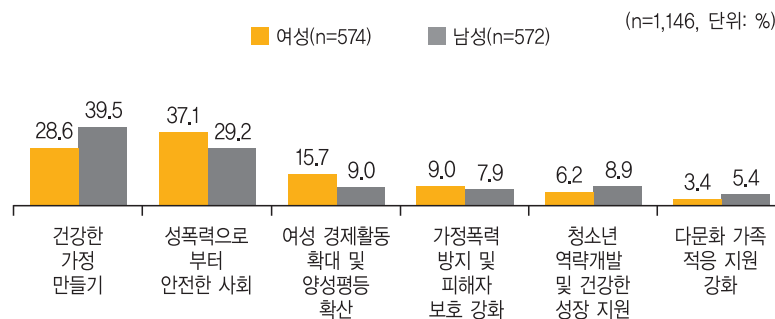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20대:42.6%, 30대:37.5%)', 40~60대에서는 '건강한 가정 만들기(40대:40.5%, 50대:41.6%, 60대:40.7%)'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나타남.

## II.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추진 계획에 대한 국민 인지도

### 이슈 #1

#### 국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정책은 '성폭력 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

- 여성·가족·청소년 정책과제의 인지도 조사 결과 추진 계획에 대한 인지도 편차는 매우 크게 나타남. 여성·가족·청소년 정책과제 중 국민들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84.8%)'이고, 그 다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79.6%)', '성폭력·성희롱 예방체계 강화(75.8%)', '성매매 예방·단속 및 피해자 보호·자립 지원 강화(75.8%)' 순으로 나타남.
- 여성가족부 소관 6대 국정과제 중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와 관련한 정책은 모두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음.



〈그림 2〉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성별)

- 이에 반해,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가치 확산(48.1%)' 정책의 인지도가 가장 낮았으며,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53.0%)', '가족 해체 등 위기가족 지원 강화(53.9%)',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55.0%)', '부문별·지역별 성평등 수준의 실질적 개선(56.7%)' 순으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남.
- 여성가족부 소관 6대 국정과제 중 '건강한 가정만들기'와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음.

지원 및 글로벌인재 육성(여성 65.3%) 남성 57.9%) 순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남성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정책은 '성매매 예방·단속 및 피해자 보호·자립 지원 강화(남성 79.3%여성 72.3%)'이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 지원 강화(남성 71.3%여성 67.9%)'의 순으로 나타나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

## 이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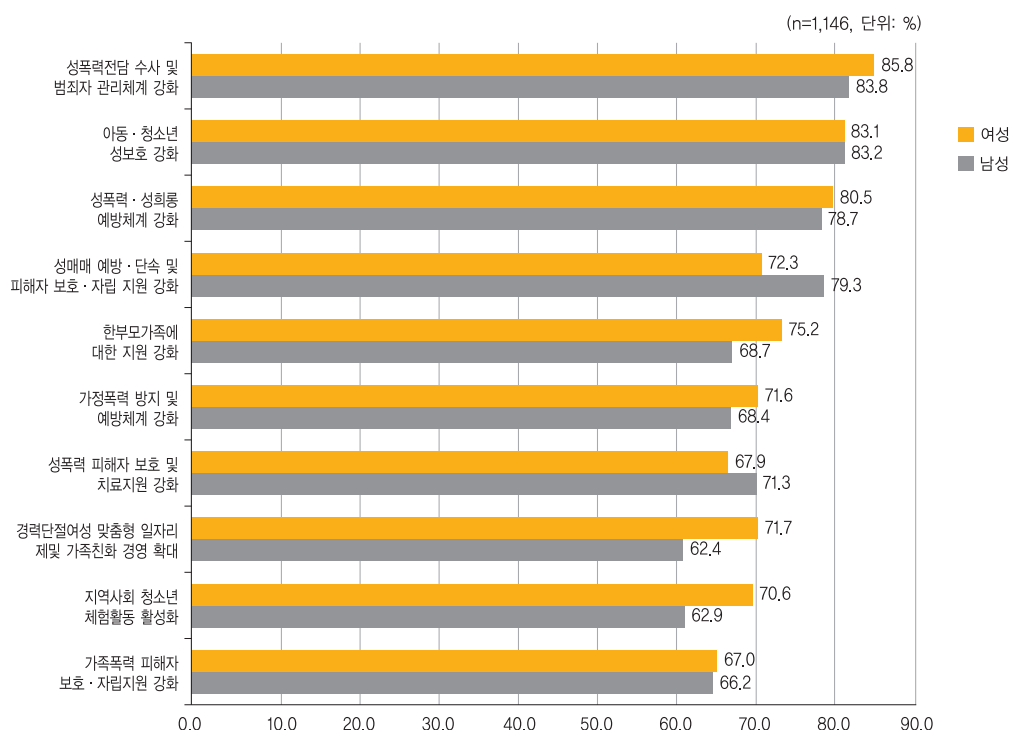
### 남녀간 인지도 차이가 가장 큰 정책은 '경력 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가족친화 경영 확대'

- 여성·가족·청소년 정책과제에 대한 인지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남녀간 인지도 차이가 가장 큰 정책은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가족친화 경영 확대(여성 71.7%남성 62.4%)'이고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여성 70.6%남성 62.9%)',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 이슈 #3

### 성폭력 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에 대한 인지도가 모든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나

- 전체 연령층이 '성폭력 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에 대하여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음.
- 20대는 여타 연령대와 달리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85.9%)'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80.4%의 높은 인지도를 보임.



〈그림 3〉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세부정책 인지도 정도 (성별)

- 30~60대는 '성폭력 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30대: 78.6%, 40대: 88.3%, 50대: 89.6%, 60대: 90.1%)'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음.(표 1)

'건강한 가정을 위한 위기가족 지원강화(3.39)', '가정 폭력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보호강화(3.39)',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3.36)'의 순으로 나타남.

### Ⅲ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추진 계획에 대한 국민 정책평가

#### 이슈 #1

#### 국민들이 지난해 가장 잘 했다고 평가한 여성가족부 소관정책은 '유연한 일자리 확대'

- '유연한 일자리 확대(3.46<sup>1)</sup>)'가 지난 1년간 여성가족부 소관정책 중 가장 좋았던 정책으로 꼽힘. 다음으로

- 여성의 경우 국정과제 중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분야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남. '유연한 일자리 확대(3.55)',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3.43)', '성매매 예방·단속 및 피해자 보호·자립 지원 강화(3.40)'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 반면 남성의 경우 국정과제 중 '건강한 가정 만들기' 분야에 대한 평가가 높음.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가치 확산(3.40)', '가족해체 등 위기가족 지원 강화(3.37)', '유연한 일자리 확대(3.37)' 순으로 나타남.

〈표 1〉 연령별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세부정책 인지도 정도

	20대(총 227명)	30대(총 273명)	40대(총 311명)	50대(총 257명)	60대(총 78명)
1위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85.9%)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78.6%)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88.3%)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89.6%)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90.1%)
2위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80.4%)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77.3%)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86.9%)	성폭력·성희롱예방체계 강화(87.6%)	성폭력·성희롱예방체계 강화(81.4%)
3위	성폭력·성희롱예방체계 강화(75.7%)	성폭력·성희롱예방체계 강화(72.4%)	성폭력·성희롱예방체계 강화(81.8%)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85.1%)	성매매예방·단속 및 피해자 보호·자립지원 강화(75.0%)
4위	성매매예방·단속 및 피해자 보호·자립지원 강화(73.4%)	성매매예방·단속 및 피해자 보호·자립지원 강화(67.2%)	성매매예방·단속 및 피해자 보호·자립지원 강화(79.3%)	성매매예방·단속 및 피해자 보호·자립지원 강화(82.9%)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73.6%)
5위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67.7%)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및 가족친화 경영 확대(65.9%)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78.2%)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78.5%)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72.0%)

1) Likert 5점 척도(1=전혀 잘 안 되고 있다, 2=별로 잘 안 되고 있다, 3=그저 그렇다, 4=대체로 잘 되고 있다, 5=매우 잘 되고 있다)로 평가했을 때의 평균 값임.

- '유연한 일자리 확대'는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잘했다고 평가됨(20대: 3.55, 30대: 3.52, 40대: 3.48, 50대: 3.34, 60대: 3.37). 그 외 20대에서는 '가정 폭력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3.45)', 30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3.50)', 40대~50대에서는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가치 확산(40대: 3.39, 50대: 3.34)'으로 나타났고 60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자립지원 강화(3.38)'를 가장 잘했다고 평가함.

## 이슈 #2

### 남녀간 정책평가 차이가 가장 큰 정책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 수행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평가를 보인 정책은 '성매매 예방·단속 및 피해자 보호·자립 지원 강화(여성: 3.40) 남성: 3.21)', '성폭력 전담수사 및 범죄자 관리

체계 강화(여성: 3.28)남성: 3.10)'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분야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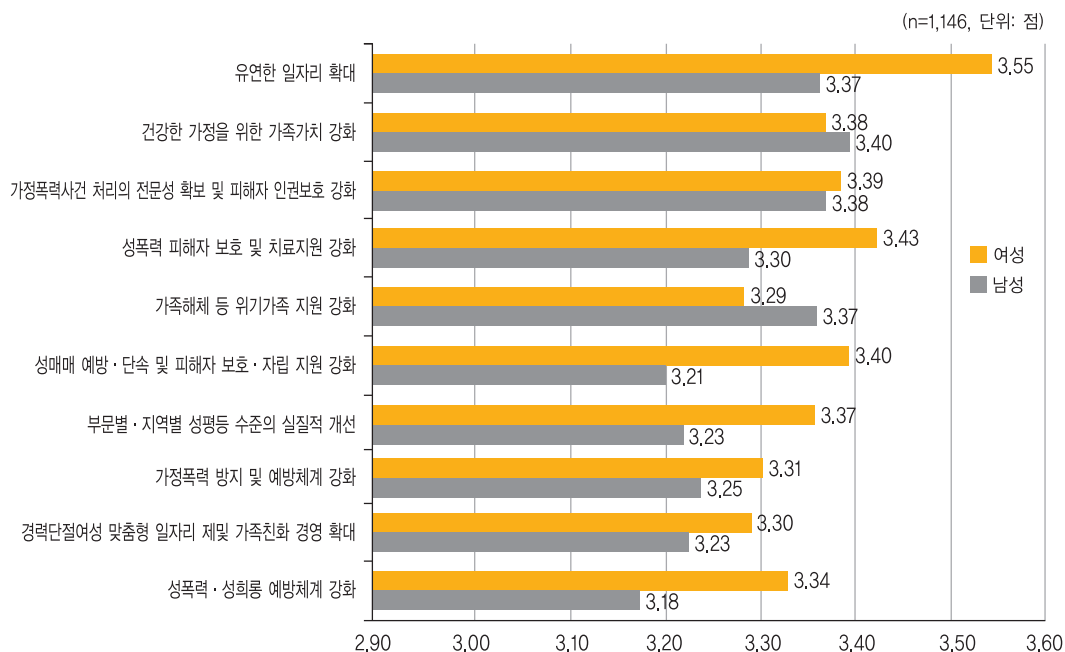
- 반대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평가를 보인 분야는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만들기 분야로 '다문화가족정착 정착단계 및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 서비스 제공(남성:3.05)여성:2.90)',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남성:3.16) 여성 3.02'의 순으로 나타남.(그림 4))

## IV.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추진 계획에 대한 중요도

### 이슈 #1

### 국민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정책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 여성가족부 국정과제에 대한 중요도 조사 결과 국민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4.53<sup>2)</sup>)'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선정



〈그림 4〉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추진계획 평가 정도 (성별)

2) 정책의 중요도는 Likert 5점 척도(1=전혀 중요하지 않다, 2=중요하지 않다, 3=보통이다, 4=중요하다, 5=매우 중요하다)로 평가했을 때의 평균 값임.

- 다음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4.45)', '성폭력전담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4.40)'를 꼽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관련 분야정책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남성 모두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가장 중요한 추진계획으로 꼽았음.
- 연령대별로 살펴볼 경우, 20대와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음(30대: 4.52, 40대: 4.60, 50대: 4.58). 20대의 경우 '성폭력 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4.44)'를, 60대의 경우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4.41)' 정책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음.(〈표 2〉)



〈표 2〉 연령별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추진계획 중요도 정도

	20대(총 287명)	30대(총 273명)	40대(총 311명)	50대(총 257명)	60대(총 78명)
1위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4.44)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4.52)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4.60)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4.58)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4.41)
2위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4.42)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4.43)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4.47)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4.46)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4.40)
3위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4.42)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4.38)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4.40)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4.40)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4.36)
4위	성폭력·성희롱예방체계 강화(4.28)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4.29)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4.34)	성폭력·성희롱예방체계 강화(4.36)	성폭력·성희롱예방체계 강화(4.24)
5위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4.25)	가족폭력피해자보호·자립지원강화(4.24)	성폭력·성희롱예방체계 강화(4.29)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4.35)	청소년 위기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인프라 구축(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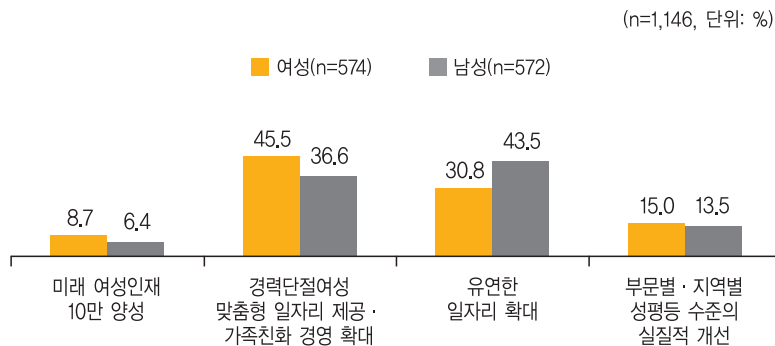
## V.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국정 과제별 추진계획 우선순위

### ☞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가족친화경영 확대'가 가장 중요

-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에 대해 응답자들은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가족친화 경영 확대(41.1%)'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그 다음으로 '유연한 일자리 확대(37.1%)', '부문별·지역별 성평등 수준의

실질적 개선(14.3%)',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7.5%)'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가족친화 경영 확대'가, 남성의 경우 '유연한 일자리 확대'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나타남.(그림 5)
- 20대는 '유연한 일자리 확대', 30~40대는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가족친화 경영 확대', 50대는 '유연한 일자리 확대', 60대는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가족친화 경영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함.(그림 5)



〈그림 5〉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에 가장 중요한 정책(성별)

〈표 3〉 국정과제별 추진계획 우선순위

국정과제	추진계획 우선순위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1.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가족친화정책 2. 유연한 일자리 확대 3. 부문별·지역별 성평등 수준의 실질적 개선 4.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1.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2.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 3. 성폭력·성희롱 예방체계 강화 4.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5. 성매매 예방·단속 및 피해자 보호·자립 지원 강화
건강한 가정 만들기	1.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 가치 확산 2. 가족해체 등 위기가족 지원 강화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강화	1. 일반국민의 다문화인식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및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조정 2.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글로벌 인재 육성 3. 다문화가족 정착 단계 및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	1. 청소년 위기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인프라 구축 2.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1.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2. 가정폭력 방지 및 예방체계 강화 3.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자립지원 강화

- 기타 의견으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남녀 차이를 인정하고 이에 맞는 정책 필요', '사회적 인식 개선', '보육시설 및 지원 확대', '여성부의 현실성 있는 정책관리',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예산 확보, 정책 홍보)',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여성취업에 대한 지속적인 과정 관리 필요' 등의 순으로 의견이 제시됨.

####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가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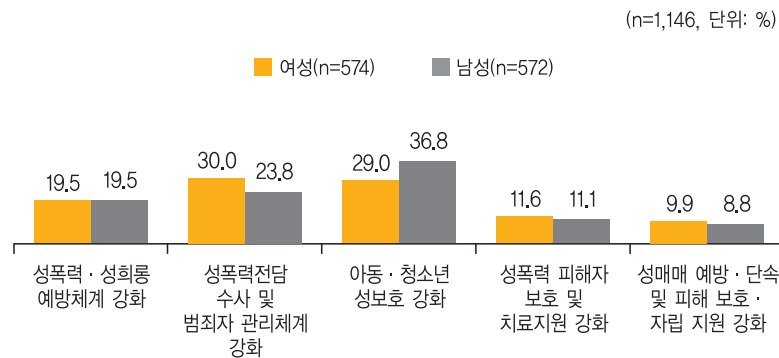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에 대해 응답자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32.9%)'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 다음으로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26.9%)', '성폭력·성희롱 예방체계 강화(19.5%)',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11.3%)', '성매매 예방·단속 및 피해자 보호·자립 지원 강화(9.4%)'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함.
- 여성의 경우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가, 남성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나타남.(그림 6)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함.(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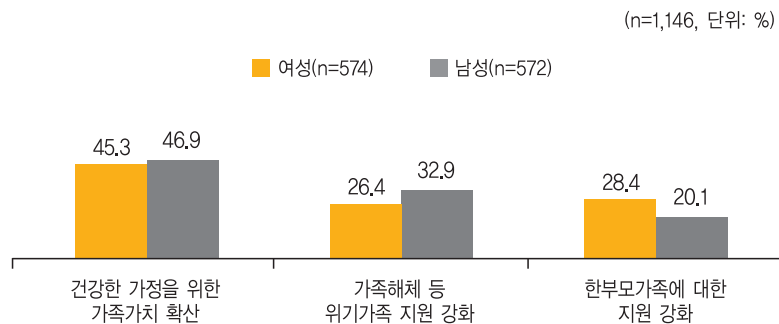
- 추가 의견으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함(490명).

#### ☞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 가치 확산'이 우선

-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 가치 확산(46.1%)', 그 다음으로 '가족해체 등 위기가족 지원 강화(29.7%)',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24.3%)' 순으로 나타남.
-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 가치 확산 응답은 남성과 여성 모두(그림 7), 그리고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나타남.
- 추가적인 의견으로 '경제적 지원 확대(214명)', '가족 공동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적 지원 강화(178명)'가 제시되었음.



〈그림 6〉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가장 중요한 정책(성별)



〈그림 7〉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정책(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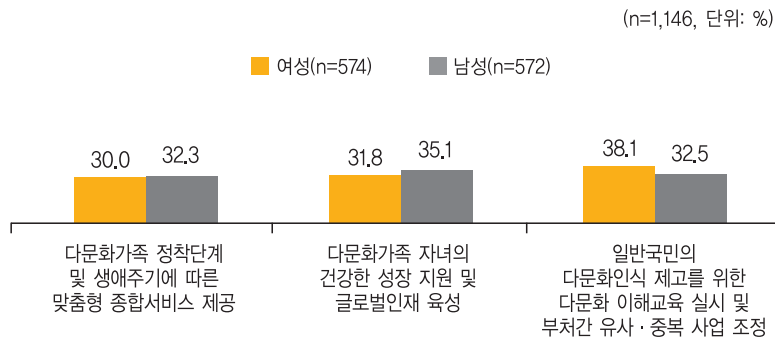
☞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해 '일반국민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및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조정'이 우선**

-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에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일반국민의 다문화인식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및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조정(35.3%)'이, 그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글로벌 인재 육성(33.5%)', '다문화가족 정착 단계 및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31.2%)'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일반국민의 다문화인식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및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조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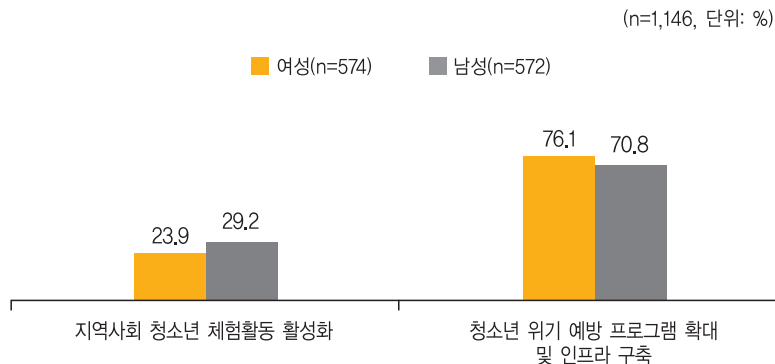
남성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 응답함. (그림 8))

☞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 위기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이 중요**

-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청소년 위기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인프라 구축(73.5%)'으로 나타남.
- 성별·연령별 모두 '청소년 위기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 응답함.(그림 9))



〈그림 8〉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강화에 가장 중요한 정책(성별)



〈그림 9〉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에 가장 중요한 정책(성별)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정 폭력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가 우선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43.5%)’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그 다음으로 ‘가정폭력 방지 및 예방체계 강화(36.0%)’,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자립지원 강화(20.5%)’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47.1%)’가, 남성의 경우 ‘가정폭력 방지 및 예방체계 강화(40.9%)’가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 응답함.(그림 10)

수 있음. 현 정부의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정책평가, 정책중요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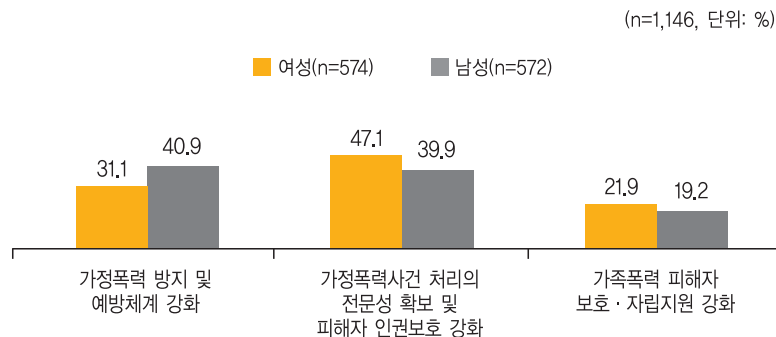
- 첫째, 여성·가족·청소년 정책분야의 국정과제 중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는 ‘건강한 가정 만들기’,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순으로 나타나 건강가정과 안전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남성은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여성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아 성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에 차이를 보임.  
또한 20~30대 젊은 층에서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40대 이상에서는 ‘건강한 가정만들기’를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꼽아 연령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VI 요약 및 결론

- 본 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국민들은 대체로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 둘째, 국민들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 중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반적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여성의 인지도가 높은편으로 나타났고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가족친화 경영 확대’에 대한 남녀간 인지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0〉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에 가장 중요한 정책(성별)

모든 연령대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관련 추진 계획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다만, 건강한 가정 만들기와 여성경제활동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부문에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어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봄.

- 셋째, 국민들은 '유연한 일자리 확대'를 여성가족부 소관 정책 중 가장 잘 한 추진계획으로 평가함. '유연한 일자리 확대 정책'은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잘했다고 평가함.

다만, 여성들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대한 평가가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건강한 가정 만들기' 정책에 대한 정책평가가 높은 점수를 나타내 성별로 차이를 보임.

- 넷째, 세부정책에 대한 중요도 조사 결과 국민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선정함.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20대를 제외한 전연령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아 최근 증가하는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할 것임.<sup>3)</sup>

- 마지막으로 조사결과 인권·안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여성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양성평등기본법안', '성평등기본법안' 등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그 성과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방지 등 기본적인 인권·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것은 여성의 인권·안전이 아직 보장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다 할 것임.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의 저하에 따른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되고 여성고용률은 2000년 47.0%에서 2011년 48.1%로 1.1%포인트 증가하는 것에 그쳐 장기 정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일자리 확대 및 경제관련 정책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 여성들의 경우 여성일자리·인재분야의 경우 경력 단절의 예방을 위한 각종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시간선택제를 비롯한 유연한 양질의 일자리 확산과 가정의 양립제도 정착, 여성인재양성 등을 통한 유리천장 극복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반면 여성대표성 증진 문제, 평등문화 증진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제결혼의 증가<sup>4)</sup>로 인한 다문화 사회로 이행되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적은 것으로 보임. 위 정책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임.

여성정책이 환경변화에 민감하다는 것을 반영할 때, 국민의 참여와 만족도에 따른 조정과 새로운 기획, 생애주기, 대상에 따른 통합적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성폭력 사건은 2009년 16,156건에서 2010년 19,939건, 2011년 22,034건으로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 92.2%였던 검거율은 2010년 88.5%로 하락하고 2011년 84.4%로 하락(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한국의 성인지 통계)하고 있고 부부폭력 발생률 및 가정폭력상당건수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2005년 4만 7266건에서 2008년 4만 7760건, 2010년 6만 489건으로 꾸준히 상승)

4) 2004년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1.4%로 최초로 10%대에 진입하였음. 이것은 1991년에 비해 약 10배가 증가한 것이고 2002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통계청, 201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하였고 전체 결혼이민자 중 국내 거주기간 1년 미만인 9.6%, 1-2년 13.7%, 2-5년 35.7%, 5-10년 25.4%, 10년 이상 15.6%로 국내 거주기간 10년 이상된 이들이 15.6%, 5년 이상된 이들은 41%를 차지(여성가족부, 2012년 전국다문화실태조사)하여 거주기간도 증가하고 있음.



(집필 : 남궁윤영 연구원)